

李 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거부… “경찰 권한 보완은 필요”

“위헌·입법권 부정할 정도 사안 아나
수사·기소 분리, 사법개혁의 첫걸음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보완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거부권 행사는 없다는 의미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 및 비대화 우려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후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한 조항(제196조)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이 대통령은 “이들(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는데, 이 법률안이 위헌·집행불능·국익위배·행정부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입법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질서에 위반돼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 상태로는 (행정부)가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날(3일)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31일 법안 통과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대다수였다.

또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

심 전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수사부터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먼지떨이식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자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 후속조치를 입법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

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제도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로운 수사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改革)은 가족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부동산 세제 개편 두고 “정상화” vs “징벌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힘, ‘세금 폭탄’ 비판하며 철회 요구
민주 “국민의힘, 일부 내용만 부각”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올리고 혜택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6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똥똥한 한 채’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8년부터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보유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가 2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30억원 수준까지는 보유세를 완화하며, 집값이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여도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에 국민의힘은 ‘증세 고지서’,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

발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 잡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공급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올렸다.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집 가진, 집 없는 국민 모두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

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국 수석대변인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집권 후 내놓은 실상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무차별 과세 폭주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무모한 징벌적 과세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임차인”이라며 “전·월세 매물 실종과 주거비 급등으로 직결돼 서민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공세에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했다”며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한 곳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불합리한 세제는 바로잡겠다”며 “서민과 중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세를 퍼붓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자신의 SNS에 “어제 나온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조세 개편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내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지금 장소를 섭외 중이다”라고 전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李 “원유 도입 다변화·비축 확대해야”

》 1면 ‘정부 부처 업무보고’서 계속

이어 원유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해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에너지 강국이 되려면 통상 정책을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펴 나가야 한다”며 “특정 국가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곤란

하다. 지금 그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산업부가 잘 해주고 계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 주셨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고 격려하면서도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

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생에너지 등 정책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또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맑은 물 또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되겠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 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